

다산포럼



**박종권**  
호서대학교 사육합대학 교수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개권유익(開卷有益)이라고 한다. 책을 펴서 읽으면 반드시 이로움이 있다는 뜻이다. 독서를 권장하는 대표적인 글귀이다. 한데 책을 끝까지 읽지 않아도, 그저 펼치기만 해도 이롭다는 뜻으로 이를 가르치는 이도 있다. 글썸다. 천 리 먼 길도 한 걸음부터, 또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다산의 생각은 달랐다.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박석무 편역)에서 선생은 남독(濫讀)을 경계했다. 마구잡이로 그저 읽어 내리기만 한다면 하루에 백 번 천 번을 읽어도 추천하는 도서에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와 다산 정약용의 '흠흠신서'가 대표 목록으로 오른다는 말을 들었다. 피식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로 읽거나 했을까? 읽었다면 다산의 독서 방식이었을까? 아니면 "바쁜 세상에 책은 펼치기만 해도

‘흠흠’(欽欽)을 다시 생각하며

유익하다"며 속독(熟讀) 대신 속독(速讀)으로 책 한 권 그냥 때었을까?

진정 다산의 흠흠신서를 읽었다면,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작금의 세태를 어떻게 봐야 하나. 서문은 '인명 계호천'(人命繫乎天)으로 시작한다. "오직 하늘만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니,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매여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하늘의 권한을 대신 쥐고 행하면서도 삼가고 두려워할 줄을 몰라 세밀한 부분까지 명확하게 분별하지 못한 채 소홀히 하고 흐리멍덩하게 처리하여, 살려야 하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죽여야 하는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고 당시 조선 관리의 행태를 꼬집는다.

관리들은 그러면서도 오히려 태연히 편안하게 지낸다고 비판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고, 여자에게 미혹되기도 하면서, 백성들이 비참하게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도 가없이 여겨 주재할 줄을 모르니 이는 매우 큰 죄악이다"라고 했다.

이는 과연 조선 후기 1822년의 시대상일 뿐일까? 지금은 혹시 다른가?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선택적으로 남용하고, 여전히 먼지떨이식 '별건 수사'를 벌이지 않나? 법관의 판결은 같은 사안을 두고도 무죄와 유죄가 엇갈리고, 형량도 고무줄이어서 "그때그때 달라요"라는 비아냥을 듣기에 이르지 않았나?

그럼에도 반성도 성찰도 없다. 야당의 당협위원장까지 말은 고검장 출신이 앞선 수재 혐의로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술자리에 동석한 검사들 중 일부는 이른바 '김영란법'을 피하기 위해 96만 2000원을 접대받았다며 빠져나갔다. '법꾸리자'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하늘의 권한을 대신 행하는 자들이 부정하게 재물을 얻고 여자에게 미혹되면서 태연하고도 편안하게 지낸다는 다산의 일침이 21세기 오늘날까지도 관통하고 있다.

다산은 책 이름을 '흠흠신서'로 정한 이유를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삼가고 또 삼가는 것'(欽欽, 흠흠)이 형벌을 다스리는 근본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오늘날 법조인들이 삼가고 삼간다는 뜻을 살렸다면,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세태를 조금은 진정시켰을 수 있다고 본다. 예컨대 정제불명의 단체들이 하는 마구잡이 고소·고발은 알아서 무시하거나 적절하게 기각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검찰의 입맛에 따라 꼭 집어 수사하고 기소하니 고소·고발이 횡행한다. 이러한 선택적 정의에 사법 신뢰도 잃고 있다. 게다가 법조 출신 정치인들마저 정치로 풀 문제를 서초동으로 가져가 스스로 검찰과 법원에 묶여 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자초한다.

'정약용, 조선의 정의를 말하다'를 쓴 김호 역시 "다산은 정치의 최종 목표를 소송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사회에 두었다"고 했다. 재판에 입하면 최선을 다해 판결해야 하지만, 바람직한 것은 분쟁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봤다. 이를 위해서는 법의 집행자들이 먼저 신독(愼獨)한 자세로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우즈는 법의 과잉 시대이다. 법 없이도 살 시민들에게 법의 율가미를 던지는 것은 검찰국가의 표징이다. 민주공화국에서 모든 권력은 법 아닌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차체에 법조인들은 흠흠신서를 서문만이라도 쟁겨 읽었으면 좋겠다.

청춘 특특

코로나19 위기로 전환점에 선 대학 동아리



**박재훈**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2학년  
조대신문 기자

올해 새 학기 교내 풍경은 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작년과 사뭇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비대면 방식에 따라 일부 실습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학교를 방문한 학우들만 보였던 작년과는 달리, 이제 캠퍼스는 각종 수업을 수강하기 위해 학우들이 모여 활발한 분위기를 보인다.

그러나 활발해진 캠퍼스 분위기와 달리, 학내 동아리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아리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학내 행사나 오프라인 모임은 미미수이고, 신입 부원 모집을 위한 동아리 홍보 활동에도 여전히 제한이 있다. 무엇보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규정은 동아리 활동과 내부 친목 모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19가 진정되면서 강의실, 도서관 등 학교 시설 이용 통제가 다소 완화된 상황이다. 하지만 학내 동아리들이 활동하는 학생회관의 이용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학생회관 내 동아리방은 이용 시간이 3시간으로 제한돼 있고, 일주일에 동아리방에 모일 수 있는 횟수도 제한돼 있다. 더불어 동아리 활동 자체가 방역 수칙

상 사적 모임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5인 이상의 부원이 동아리방에 모여 활동하는 것이 금지된다.

조선대 총동아리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의 코로나19 예상이 증편되면서 반대급부도 동아리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그러나 동아리들이 모여 있는 학생회관에는 다른 학교 시설과 달리 열화상 카메라 같은 방역 설비도 설치되지 않았고, 출입구 방역 관리 업무도 총동아리연합회나 일부 동아리 인원이 자발적으로 맡아 운영하고 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어느덧 각 학내 동아리에도 신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입 부원 모집이 시작됐지만, 학내 동아리들은 부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입 부원과 기존 부원의 소통 기회 부족이 무엇보다 심각하다. 사적 모임으로 분류되는 동아리 활동 특성상 4인 이하로 인원이 제한되다 보니 신입 부원과 기존 부원들이 한 동아리방에서 함께 활동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동아리 외적으로 신입 부원과 기존 부원이 소통하는 자리인 친목 모임은 아예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다.

소통 부족은 동아리 분위기 침체를 가져오는 것을 넘어 동아리들을 존립 위기 상황으로까지 몰아넣고 있다. 본래 동아리들은 이 시점에 2학년 부원들이 동아리 운영을 주도하게 되고, 상위 학년 부원들은 후배 부원들에게 동아리 운영을 인수인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작년에 동아리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2학년 부원들이 동아리에 익숙해지지 못해 사실상 상위 학년

부원들이 계속 동아리를 이끌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동아리들은 내부적으로 동아리 운영 중단을 결정하는 사례도 있다. 조선대 총동아리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동아리 해체를 결정한 사례가 전년도보다 증가했으며, 올해도 일부 동아리가 해체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측된다.

물론 모든 동아리의 상황이 이렇게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밴드·합주 활동을 하는 문예 분과의 동아리들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외부 시설을 마련하고 있다. 체육 및 무술 등 신체 활동을 중점으로 하는 수련 분과에선 학생회관 내부에 활동실을 조성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활동 촉진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봉사 분과 동아리들은 길고양이 보호 같은 소규모 봉사 활동을 수행하거나 청각장애인 대상자 막 제작과 같은 비대면 봉사 활동을 신선했다.

이런 일부 동아리들의 자체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내 동아리들은 동아리 활동을 변화시키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이런 동아리들은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으로 학생 회관 이용 제한이 완화되거나 동아리 활동이 사적 모임으로 분류되는 방역 방침이 개정되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학생 자치활동의 꽃이자 대학 생활의 모미라 불리는 동아리 활동, 학내 동아리들은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불러오는 불확실한 미래와 마주하고 있다. 어쩌면 동아리 문화가 코로나19 이전 대학에 존재했던 한 시대의 유물로 남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기고

‘도심 융합 특구’로 광주의 미래에 날개를 달자



**김재식**  
광주시 도시계획과장

작년 말 광주 상무지구 일원이 정부에서 발표한 '도심 융합 특구'로 선정되었다. 도심 융합 특구는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 거점도시인 지방 5대 광역시에 일터, 삶터, 배움터, 놀이터가 결합된 혁신적 복합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0년 사상 처음으로 국내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크로스(dead-cross) 현상과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는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는 등 지역에서는 산업과 생활 기반의 붕괴를 우려할 정도의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나서서 지방 광역시 단위에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고밀도 혁신 공간 플랫폼을 조성하고자 뜻을 모으게 되었다.

특히 도심 융합 특구는 기존 산업단지가 조성 비용 절감을 위해 도시 외곽에 제조업 위주의 업종으로 구성되는 점과 달리 도시 외곽이 아닌 '도심'에 위치한다. 주거·교통·문화·교육·복지·의료·상업 등 편의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어 청년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곳이다.

청년이 선호하는 도심에서 실업의 두려움 없이 창업

의 공간과 미래 유망기업에 취업할 기회가 주어진다. 청년들은 수도권으로의 진학이나 진로를 선택하지 않고 지역에서 배우며 성장하고 뿌리내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광주시에서는 지난해 12월 상무지구 일원 약 85만㎡가 도심 융합 특구로 선정되었다. 이 일대는 생활 및 교통 인프라가 우수하고 개발 가능 용지가 충분하여 지역 혁신 성장거점으로 육성이 가능하다. 아울러 한전 등 나주혁신도시(15km)와 연계한 산업 육성도 기대된다. 특히 개발 가능 용지 대부분이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 등이 소유한 공유지(약 29만㎡)와 농지인 사유지(약 29만㎡)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역이다. 시는 특구 예정지역의 사유지인 농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은 도심 융합 특구 지정과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사전 조치를 완료하였다.

광주시는 이따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 들어가게 된다. 기본계획 용역에서는 도심에 적합한 미래 유망 산업 생태계 구축, 미래 생활 양식에 부합하는 정주 환경 조성, 도전과 제도 전이 일상화되는 혁신 환경 육성,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공간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래 유망 산업에 대한 청년의 도전과 유망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환경 지원 방안, 도심 융합 특구 조성 이후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 방안, 국제·지방세·부담금 등 감면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또한 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기업중합지원센터·복합커뮤니티센터 등에

대한 비용 부담 및 정부 부처 간 협력 방안 등도 마련하게 된다.

향후 계획수립 과정에서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겠지만 광주시는 상무지구 일원에 창업 3년 미만의 스타트업(Start-up) 기업 임대 공간 300개 이상, 창업 3년 이상의 스케일업(Scale-up) 임대 공간 300개 이상, 중견기업 분양 공간 50개 이상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있다.

각각의 공간은 수도권 기업이 광주로 이전을 검토할 수준 이상의 경쟁력을 갖춘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1 단계로 공공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기업중합지원센터와 임대 공간을 조성하여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창업 활동을 활성화하고, 2 단계로 중견기업 분양 공간을 조성하는 단계별 입지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이 체계적으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심 융합 특구에서 권장하는 업종의 장업을 희망하는 청년은 기업중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연구개발(R&D), 컨설팅, 시장 분석, 기업 인증, 기술 테스트, 사업화, 판로 개척, 고용, 특허, 금융, 법률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종합 지원뿐만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재도전의 기회가 주어지는 지원 대책으로 실패의 두려움 없이 도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시민·전문가·관련 단체·중앙정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과감하고도 혁신적인 발상의 전환과 총총한 계획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혁신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자생적인 산업 융합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

社說

대통령 특별연설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았나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향후 국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남은 1년이 지난 4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느낀다"라며 운을 뗐다. 이어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국민들께서 조금만 더 견뎌 달라"고 부탁했다.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한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해 국산 백신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산 '부동산 정책'도 빼놓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기나긴 특별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경제'를 총 43번이나 언급했을 정도로 경제 회복을 내세웠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경제 성장을 이끌어 냈다는 자화자찬도 있었다.

문 대통령의 특별연설에 대해 덧붙여진 주장은 "당의 향후 주요 과제와 완벽하게 일치한 담화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연설이 '독선과 야집을 지속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악평을 남겼다. 국민의당도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아닌, 슬픈 현실만 되새기게 되는 최악의 연설이었다"고 혹평했다. 대통령의 연설을 놓고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시각의 차이로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장관 후보자 부적격 논란에 대한 답변은 일반인 입장에서 봐도 실망스럽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부적격 지적을 받은 장관들을 일일이 거론하며 이들이 매우 능력이 있는 인물들임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능력 부분은 그냥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대통령의 의도와는 달리 원론적인 '제도' 이야기를 함으로써 실제로는 부적격 후보들을 감싼 셈이 되고 말았다. 일반 국민 눈높이와는 확연히 다른 시각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앞으로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했으니 그때 가서라도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란다.

농촌까지 파고든 마약사범 당장 뿌리뽑아야

광주·전남 지역에서 최근 수년 새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전에는 집안에서 양귀비를 키우거나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브로커를 통해 집단으로 구매·투약하는 등 수법도 대법해지고 있다.

광주에서 최근 3년 간 검거된 마약사범은 모두 705명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 붙잡힌 마약사범은 304명으로 이태 전인 2018년(157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전남 역시 2018년 162명에서 이듬해 219명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농어촌과 산업단지 등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마약 사범도 크게 늘고 있다. 목포해경이 지난 5월 새벽 목포시 상동의 한 외국인 전용 주점을 급습해 보니 외국인 선원 24명과 이주 여성 10명 등 34명이 '마약 파티'를 벌이고 있었다. 해경은 판매 총책임 A씨

의 자택과 주점에서 엑스터시·합성대마·헤로인 등으로 추정되는 마약류를 다량 확보했다.

쌀 판매로 위장해 마약을 거래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전남경찰청은 최근 농촌 지역에서 마약을 유통해 B씨와 쌀 유통업자 C씨 등 아홉 명을 붙잡아 이 중 여섯 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택배 수화물을 이용해 필로폰과 대마초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마약은 그동안 청정지대로 알려져 있던 농촌 지역까지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마약은 한번 중독되면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불행의 늪에 빠지게 하고 지역 사회를 병들게 한다. 그럼에도 유통 구조가 다변화되면서 구입이 용이해지다 보니 사회 전체가 무방비로 마약에 노출될 위기를 맞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첨단 과학의 단속 기법을 총동원해 공급·판매 조직을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공통점이 많아 종종 비교되는 국가다. 5000년 이상 지속된 민족의 역사가 그렇고, 나라 잃은 슬픔을 겪은 사실 또한 그러하다. 유엔 결의로 1948년 건국된 이후 전쟁으로 인해 국가 존망의 기로에 서기도 했다. 양국 모두 자원이 풍부하지 않고 안보 상황이 불안하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위협 등 여전히 적대적인 아랍 국가에 에워싸여 있고, 한국은 핵을 실질적으로 보유한 북한과 마주하고 있다.

하지만 두 나라 모두 기적에 가까운 경제 발전을 이뤄 냈다. 한 세대 만에 최빈국에서 벗어나 선진국 클럽인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회원국이 된 것이다. 이는 치열한 교육열과 함께 위기에 더 결집하는 국민성이 주요인으로 꼽힌다.

최근 이스라엘 보건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치료 중인 코로나19 환자 수가 1000명 아래로 내려갔다고 한다. 2차 유행과 3차 유행의 정점이던 지난해 10월과 1월만 해도 환자수가 7만~8만 명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마디로 '상전벽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대응 부실의 대가를 특별히 치렀던 이스라엘은

국력을 총동원, 백신 확보에 나서 상황을 반전시켰다.

현재, 이스라엘 전체 인구(약 930만 명)의 54%가 넘는 507만여 명이 2회까지 접종을 마쳤다. 성인 인구 기준 접종률은 80%에 달한다. 이제 실내에서도 '노 마스크'를 허용하는 방안까지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뼈아픈 실패를 백신 삼아 코로나 위기를 넘어서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도 한때 'K-방역'으로 세계의 모범이 됐지만 백신 확보 및 접종이 늦어지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500명을 오르내리는 등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백신 보탬고개'라는 말과 함께 11월 집단 면역에 대한 요구마저 확산되는 실정이다. 여기에는 K-방역에 비해 백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실책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위기는 결국 극복될 것이다. 우리는 국민적 역량을 모아 그동안 수많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해 온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어렵지만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며 함께 희망을 만들어 나가자.

/임동욱 선임기자 겸 서울취재본부장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